



ETSI 제40차 총회(GA)

박종봉 / TTA 표준기획본부 기획전략부 전임연구원

이종호 / TTA 표준화본부 표준지원부장

1. 개요

- 일 시 : 2002. 11. 26 ~ 27(2일간)
- 장 소 : 니스/ 프랑스
- 참석인원 : 약 150여 명
- 주요안건 : 의장단(총회, 이사회) 선출, 2003년도 예산계획, 3GPP 활동 전면 재검토, 주요활동 결과보고 등

2. 주요 결의사항

- ETSI 회원사 승인 : 총 765개사(2001년도 대비 16% 감소)
- 총회 및 이사회 의장단(임원) 선출
- 2003년도 예산계획 승인 : 총 21,890,000 Euro (약 270억 원)
- 3GPP 활동 전면 재검토를 위한 Ad-hoc 그룹 신설
- 지적재산권(IPR) 정책운용과 관련한 Ad-hoc 그룹

신설

- 2003년도 ETSI 전략계획 및 사무국 사업계획 승인 등

3. 주요 논의사항

가. 신규 회원 승인

- 회원수 증가 : 정회원(21개사), 준회원(16개사)
- 회원수 감소 : 철회(98개사), 자격상실(86개사)
- 총 회원수 : 765개사

[표 1 참조]

나. 의장단 선출

- 총회 의장단
 - 의장 : Mr. Karsten Meinhold(Simens, 독일)
 - ※ 전 총회 부의장

[표 1] ETSI, 회원 현황

구분	정회원	준회원	업저버	분담금 단위	
				증가	감소
40차 총회시 회원사	694	207	48	2,986	
철회	-68	-24	-6		192
자격상실	-49	-35	-2		94
분담금 증/감					41
소계	557	148	40	2,986	327
계	765개 사			2,659단위	

※ 39차 총회의 회원수 총 913개사에서 급격히 감소(148개 사)한 이유는 유럽의 경제불황에 기인함(기존 회원사의 회원탈퇴, 분담금 납입의 지연으로 인한 자격상실)

- 부의장 : Mr. John Philips (Nortel Networks, 영국)
- Mr. Jean Dorleans (AFUTT, 덴마크)

○ 이사회 의장 및 임원

- 의장 : Mr. Francisco da Silva (Portugal Telecom, 포르투갈)
- ※ 전 총회 의장
- 임원 : 27명의 입후보자가 전원 임원으로 선출됨

다. 이사회 활동보고

- 외부 기관과의 협력활동 형성 및 강화 (ICAO, RTCM, OMA 등)
- 기술조직 재편
 - TC SEC(Security) 폐지
 - TC ESI(Electronic Signatures and Infrastructures) 신설
 - TC LI(Lawful Interception) 신설
- 기술조직 의장단 선임 (7개 기술위원회)
- 기술조직 개혁 관련
 - 현재의 기술조직(Technical Committee와

- ETSI Project)는 하나의 형태로 통합키로 함
- 기술조직의 작업조정을 맡고 있는 OCG(Operational Coordination Group)의 참여범위 확대를 위한 ToR 변경결의

라. 사무총장 활동보고

- 보고에 앞서 분담금 상위 10개 사의 3년간 매출액이 1/4 가까이 줄고 있는 경제적 위기상황을 주시킴. 아울러 동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ETSI의 역할과 적극적 참여를 독려함
- EMC 및 환경보호 관련 표준화활동 추진을 위한 CEN, CENELEC과의 협력활동 강화함
- 3,000건 이상의 TS(Technical Specification), TR(Technical Report), EN(유럽표준), ES(ETSI 표준) 등 개발(2002년도 말 기준)
- 2002년도 Plugtest는 12건이 있었으며, 2003년에는 17건을 예상함
- 표준용어와 관련한 TEDDI(TERms and Definitions Database Interactive) 서비스 구축 및 운용



마. 2003년도 예산계획

- 2003년도 예산계획 : 총 21,890,000 Euro(약 270억 원)
- 최초 가입분담금 : 6,000 Euro
- 분담금 1단위 : 3,646 Euro
- 승인된 예산계획안 [표 2 참조]

- 타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 중복여부 검토
- Release 개발 및 발표시점 검토
- Release 유지보수의 적정성 검토
- 3GPP 회의주기의 적정성 검토
- 3GPP 조직구조 검토
- 3GPP 작업방법 검토
- 본 Ad-hoc 그룹의 참여범위에 대한 많은 논란이

[표 2] ETSI, 2003년도 예산

(단위 : 천Euro)

수입		지출	
항목	예산	항목	예산
법정 분담금	11,640	사무국	10,470
협력 분담금(3GPP, MESA)	3,035	EC/EFTA 특별프로젝트	1,720
자발 분담금(3GPP EU 협력사)	200	MCC	4,215
EC/EFTA	5,405	PTCC	1,250
표준 판매	550	FWP	1,875
Plugtest 수입	450	Plugtest	610
Forum 개최	0	전년도 프로젝트 이관	360
기타	250	세금 / 감가상각	1,350
전년도 프로젝트 이관	360	대손충당	40
총계	21,890	총계	21,890

바. 3GPP 활동 재검토 착수

- 배경
 - 3세대 이동통신 표준화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던 ETSI 3GPP 기술규격의 상용화 지연과 CR(Change Request)의 증가, 참여기관의 재정적 부담의 가중 등에 따라 3GPP 활동에 대한 회의가 일각에서 제기됨
-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ETSI는 Ad-hoc 그룹을 신설하여 3GPP 활동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키로 결의함. 3GPP Ad-hoc 그룹의 활동범위는 이하와 같음

있었음. ETSI 내부에서 동 사항에 대한 1차적인 논의가 있는 연후 이를 참여기관에 알려주자는 주장이 제안되었으나, 3GPP 참여기관이 초기부터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반적인 동의를 얻어 3GPP 참여기관을 포함하여 추진키로 결의함

3. 기타 및 특이사항

- IPR 정책운용 관련 Ad-hoc 그룹 신설
 - ETSI 40차 총회는 총회 산하에 IPR 정책

(policy) 운용 관련 Ad-hoc을 신설키로 결의함. 활동 주요 목적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ETSI의 IPR 정책이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며, 주요 활동범위는 이하와 같음

- 현재의 IPR 정책의 범위와 한계 이해
- 현재 IPR에 대한 ETSI 의장 가이드 검토
- ETSI 사무국에 의한 IPR 관련 활동 검토
- 현재의 IPR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검토
- 현재의 유럽 경쟁법(European Competition Law)에 관한 의장 가이드 검토

○ 2003년도 전략계획

- 2002년 이전의 “ETSI Strategic Guideline”이 갖는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차년부터는 “ETSI Strategy 2003”으로 명칭이 다소 변경되었음. 아울러, 전략의 4대 범주도 다소 변경됨

- 표준개발(Standard) : 주요 전략 토픽 도출

- Quality of Service in IP network

- Communications in case of emergencies

- Security throughout networks

- Home Networks

- IP testing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ITS) :

- RITT(Road Transport and Traffic Telematics)

- 협력(Relation) : 유럽내 표준화기관(CEN, CENELEC) 및 주요 표준화기관과의 협력강화

- 사회활동(Society) : User의 사회활동과 관련한 표준화 추진 (장애인 표준화, 응급통신, 환경보호 등)

- 서비스(Service) : 표준개발 지원활동(전자적

작업방법, 재정관리, 회원구성 등)

○ User 참여방안

- 총회 부의장 Mr. P-Y Hebert가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퇴직하면서 그동안 전담해온 User의 표준화 과정 참여방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총회에 보고함

- 기술조직 활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ETSI 사무국의 기술지원

- end-user가 ETSI 표준화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 이해관계자 집단의 관리자가 ETSI에 대표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 기술조직과 User 그룹간의 내부적 조정

- ETSI 표준을 홍보할 수 있는 워크숍 개최 등

○ ETSI의 재정악화

- 분담금 규모의 축소

- 2003년도 예산계획에 의하면 ETSI 1개 회원사가 부담해야하는 분담금 규모는 최소 15,000 Euro임

- 그러나, 전체 회원사 중 82%가 분담금 1단위(3,646Euro)만을 납부하고 있으며, 분담금이 차지하는 예산규모는 전체의 24%에 불과함

- 이에 따라, 회원사의 88%가 거대 분담금 납부 회원인 12%에 의해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임

- 유럽 IT 산업경제의 전반적 불황은 ETSI의 재정자립도를 점차 축소하고 있는 상황임


4. 참가소감

- 금번 ETSI 총회에서 확인한 사항을 단적으로 기술하면, 현재 ETSI는 고품질의 표준을 개발하는 효



율적인 공식표준화기관으로서 그리고 IMT-2000 표준개발을 주도하는 기구로서의 강력한 리더십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임. 유럽 IT 산업의 장기간 경제불황은 관련 산업체의 ETSI 표준화활동 참여여력을 강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ETSI는 재정적 어려움과 활동결과의 상용화 노력부족 등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3GPP 활동의 전면 재검토는 현재 과도한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는 국내 3GPP 활동 참가사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사무국이 총회에 제출한 문서 중 “Secretariat Review”는 ETSI 활동 정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무국이 자체의 개혁을 위한 사무국 개혁 컨설팅을 착수한다는 문서였음. 그러나, 본 문서에 대한 회원사의 결의는 그 동안의 ETSI 사무국의 노력을 높이 치하하며, 현재와 같은 업무를 보다 강화하고 별도의 컨설팅은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음. 끊임없는 개혁을 위한 ETSI 사무국의 노력과 이를 인정하는 ETSI 회원사의 모습은 ETSI가 최고의 공식표준화기관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단면이라고 생각함. 

스팸메일 제목끝 @ 표시 해야 - 6월부터... 위반엔 과태료

오는 6월 19일부터 광고성 이메일(스팸메일)의 제목란 마지막에는 반드시 '@' 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월 20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할 경우 제목란의 처음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등의 문구는 물론 제목란 끝에 의무적으로 '@'를 표시해야 한다. 스팸메일 전송방식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정통부 박성용 정보이용보호과장은 “@표시는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동시에 필터링하고 외국에서도 한글 스팸메일에 대해 필터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표준화된 광고표시 부호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스팸메일 전송 '광고' 등을 명시해야 하는 대상이 종전의 전자우편에서 오는 6월 19일부터 '전화 문자전송'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정보가 전송되는 매체'로 확대된다. 또 본문란에는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주소와 전자우편 수집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수신거부 버튼 및 수신거부 요령을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토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엔 '광고' 등의 문구표시 대상이 된 전화(휴대폰 등)나 팩스, 전자적 형태의 정보전송 매체를 이용해 광고를 보낼 경우 반드시 080전화 등 수신거부용 무료 전화번호'를 명시토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휴대폰 등 전화, 팩스, 전자적 정보전송 매체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에도 전자우편과 마찬가지로 광고처음에 '광고' '성인광고' 문구를 표기토록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1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는 한편 해당 기간중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함께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를 통한 사이버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6월 19일 이전에 개정안을 확정된 뒤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